

2017  
제13호

발간년월 2017년 10월(통권 제13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하동우 인포그래픽 김태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정책동향연구본부 동향분석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 [현안연구보고서]

###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

#### - 부산 영도연안을 사례지역으로 -

최지연 해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jychoi@kmi.re.kr/051-797-4703)

전현주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원

(hyunjj@kmi.re.kr/051-797-4720)

강창우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원

(kangchang@kmi.re.kr/051-797-4740)

연안·해양공간은 1980년대 압축적 고도성장을 견인한 물적 토대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대표적 연안·해양도시인 부산, 인천, 울산 등의 해안에는 대단위 산업단지, 발전소, 항만 등 국가기간시설이 입지하게 되었고, 그 배후지역에는 안정적 노동력 확보를 위한 주택단지도 함께 조성되었다. 그러나 2000년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침체, 산업구조의 재편, 시대가치의 변화, 과학기술발달과 저출산·고령화 등 국내외 사회경제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항만도시는 축소도시(shrinking city)로 변화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에 연안에 입지한 산업단지, 항만, 발전시설들은 노후·과소이용·유휴공간으로 변함에 따라 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해안의 접근을 방해해 바다의 힐링·웰빙가치를 원하는 도시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항만·산업공간의 노후화에 따른 환경오염과 재해범위 등의 위험, 제조업 기반 일자리 감소와 주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출 등으로 연안도시의 쇠퇴와 축소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저성장을 경험한 유럽·미국 등의 항만도시들은 도시팽창전략이 아닌 압축적이고 살기 좋으며 다양성이 넘치는 도시(compact, better, diversity)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 영국 등의 도시재생모델(urban regeneration model)을 적용해 기존 제조업·조선업 기반의 쇠퇴도시를 장기간의 환경·경제·생활(문화·복지)재생프로젝트를 통해 활력 넘치는 도시로 변신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도성장기에 팽창해 온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

‘도시재생’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10조 원대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에 박차를 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 등 쇠퇴공간을 집약적으로 정비하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도시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도시자산과 가치를 생산하는 도시재생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등과 같이 바다를 통해 성장한 도시의 재생전략은 단절된 바다와 도시공간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연안·해양 자산과 가치를 회복해 시민에게 바다의 공유 공공가치를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부산 영도연안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요인과 기본 방향에 따라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연안·해양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은 고도성장기에 활용했던 해양공간의 해체와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과거 육지에서 바다로 전진했던 개발방식이 아닌 바다에서 육지로 나아가는 공간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 즉 연안·해양의 보전·이용·개발수요가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연안·해양이 중심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져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연안·해양공간을 중심축으로 하여 바다의 가치와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노후화된 항만·조선소·산업시설 등이 입지한 도시와 바다의 연결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항만주변의 슬럼화된 지역을 우선 정비후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재생공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연안 고유의 장소성을 살려 다양한 해양경관 안에 풍부한 지역주민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어야 한다. 해양경제공간의 재배치 등을 통해 청년이 지역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정주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

## 고도성장기를 견인한 부산, 울산, 인천 등 항만·연안도시의 쇠퇴·축소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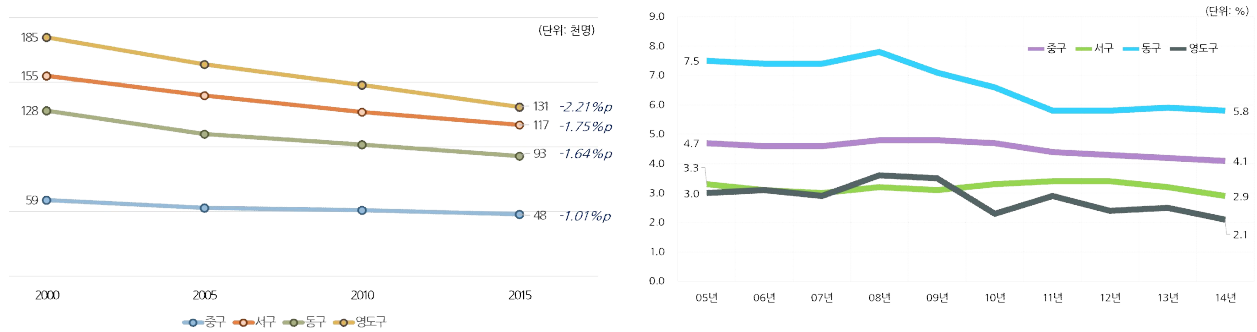
- 연안·해양공간은 압축적 고도성장을 견인하는 물적 토대로 항만, 산업단지, 발전시설, 주거단지, 물류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끌었으나, 세계 장기경제침체, 산업구조의 재편, 시대가치의 변화, IoT 등 과학기술발전,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국내 항만·산업도시들은 점차 축소와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
- 부산, 인천, 울산 등 연안에 위치한 산업단지와 발전시설은 노후·과소이용·유휴공간으로 변함에 따라 해안의 물리적·시각적·심리적 접근을 방해해 연안의 힐링·웰빙 가치를 원하는 도시민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환경오염과 재해범죄 등의 위험, 제조업 기반 일자리 감소와 주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출 등 도시문제가 발생함
- 저성장을 경험한 유럽·미국 등에서는 더 이상의 도시팽창전략이 아니 압축적이고 살기 좋으며 다양성이 넘치는 도시(compact, better, diversity)로 전환하고 있으며, 유럽은 기존 제조업·조선업 기반의 쇠퇴도시를 대상으로 장기간의 환경·경제·생활(문화·복지)재생프로젝트를 적용해 활력 넘치는 도시로 전환을 꾀하고 있음

## 연안·항만 주변 원도심 쇠퇴에 따른 연안·해양공간의 주요현안

### ■ 연안·항만 인접 원도심 공간 축소와 지역경제 위축

- 부산 원도심(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의 발달은 수출입 화물처리 위주의 항만물류공간인 부산항의 발달과 함께하였으나, 배후도심과 연계한 항만개발이 아닌 단편적·부분적 개발이 이루어져 도시와 단절된 공간으로 인식됨
- 부산 원도심 지역은 제조업의 쇠퇴와 부산항의 기능이 부산신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됨에 따라 도심공간의 축소는 점차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은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기회의 감소 등 도시축소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함

그림 1. 부산 원도심 인구성장율과 지역내총생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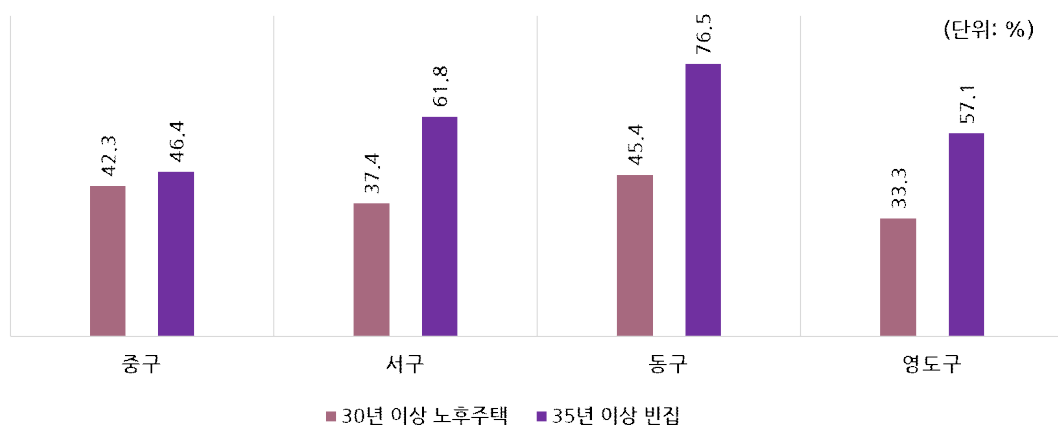


자료 : 부산광역시, 2015, 『부산광역시기본통계』과 2014년 기준 구군단위 지역내총생산 보고서, 2016. 저자 재작성

## ■ 해양과 도시공간의 단절과 노후화 심각

- 부산 원도심에 접한 해안은 조선·공업단지와 항만시설 등이 입지함에 따라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기능과 해역기능간의 연결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도시공간은 도시계획에 따라, 해역공간은 항만계획에 따라 공간이용·개발이 진행되어 해양과 도시공간의 단절성은 더욱 심화됨
- 부산 원도심 연안공간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비율은 부산 원도심은 38.4%로 부산시 21.3%로 높게 나타났고, 빈집의 경우 35년 이상 된 빈집의 비율이 중구 46.4%, 서구 61.8%, 동구 76.5%, 영도구 57.1%로 부산시 평균 29.8%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치로 건축물의 노후화와 도시의 공동화·슬럼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그림 2. 부산 원도심 지역별 30년 이상 노후주택과 35년 이상 빈집분포(2015년 기준)



자료 :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2016, pp.9~10, 저자 재작성

## ■ 해안경관·접근 불량과 재해취약성 증가

- 부산 원도심의 해안선을 따라 조선소, 선박수리조선소, 중공업시설 등을 비롯하여 어항, 항만, 수산물가공공장, 도로, 주택, 상가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음에 따라 바다의 친수성을 즐길 수 있는 해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도심 해안경관은 훼손위축되어가는 산업경관과 상업경관, 항만·어항경관 등이 점유해 있음에 따라 해안 고유의 가치와 매력이 발현되지 못함
- 영도구 남항동, 대평동, 대교동 일대 해안의 경우, 호안이나 제방 등 없이 중소조선기자재 및 수리업체, 일반상가건물 등이 입지해 있고, 주택지가 밀집해 있는 봉래동 해안은 매립지로 구성되어 있어 집중호우, 태풍 등 침수, 태풍 등 일상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 부산 원도심 재생·관리계획의 연안·해양가치 연계 부족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부산 원도심의 재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부산의 도시재생지역이 부산항 내항을 둘러싸고 있고, 바다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안과 바다와 특성과 가치를 살리고자 하는 내용은 부족한 편임
- 부산 원도심의 지역상관산업의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바다와 해안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공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바다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

# 스웨덴 말뫼, 미국 볼티모어에서는 ‘연안·해양공간’의 공공가치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재활성화 계획 추진 중

## ■ 스웨덴 말뫼 : 내일의 도시(City of Tomorrow) 프로젝트

- 스웨덴 말뫼는 1870년대 최대의 항만도시로 전성기를 누리며 호황을 누리다 1980년대 조선업의 침체로 인해 도시가 쇠퇴되면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2만7천여명이 실업자가 되고 지역은 주변 배후지역까지 슬럼화가 진행되었음
- 말뫼시정부는 항만·조선도시로 재건하기 보다는 생태환경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기업, 노동조합,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도시재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말뫼시 도시재생계획을 ‘사람(human)’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경제기반 지식기반산업 전환과 첨단산업을 주도할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과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 말뚝 도시재생은 기존 폐조선소 부지였던 베스트라 함넨(Västra Hamnen)지구의 재생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베스트라 함넨지구의 계획방향은 인간중심의 친환경 건강도시로 설정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교육과 지속가능한 일상생활을 위한 대학 캠퍼스와 생태거주단지 조성

그림 3. 스웨덴 말뚝의 베스트라 함넨지역 내 Bo01지구 전경



자료

: <http://2014-2015.nclurbandedesign.org/sustainability/live01-sustainable-neighbourhood/> (2017. 5. 11일 검색)

## ■ 미국 볼티모어 내항 종합계획 수립: Baltimore inner harbor 2.0

- 미국 볼티모어는 미국 동북부지역의 대표적 항만도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만기능이 쇠퇴되면서 지속적 인구유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령화와 경제침체를 경험하였음
- 볼티모어시 정부는 지속적인 도시쇠퇴를 극복하고 도심부 활성화하기 위해 1954년 “위대한 볼티모어 위원회(Great Baltimore Committee)”를 설치하고 볼티모어 재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내항 주변의 수변지구와 배후도시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한 개발방향을 제시함
- 볼티모어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과 해양계획과의 연계체계를 마련해 진행하고 있으며, 내항의 가치, 공공공간의 확장,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사람중심 도시형성 등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해양도시의 특성을 살린 도시개발을 추진함

- 볼티모어시정부는 볼티모어항만의 40주년을 맞이해 볼티모어 워터프론트 파트너십(waterfront partnership of baltimore)을 구성하고 볼티모어 내항 종합계획(Baltimore Inner harbor 2.0)을 마련해 내항(inner harbor)을 볼티모어와 메릴랜드주의 경제-문화생태의 핵심공간으로 재구성해, 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함
- 본 계획에서는 내항의 공공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 새로운 시민 공공공간과 보행자 연결체계, 새로운 매력적인 친수공간 조성, 녹색인프라의 구성, 공공서비스와 주차수요의 균형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산책로(promenade), 연결성(connections), 녹색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새로운 장소 창출(destinations), 이 네 가지 요인을 기본 공간디자인에 반영함

그림 4. 볼티모어 내항 조감도(좌)와 기본공간계획(우)



자료 : Waterfront partnership of Baltimore, Baltimore inner harbor 2.0, 2013, p.28, p.17

## 연안·해양가치 발현과 연안-도시의 연결성, 기후변화,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한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 제안

### ■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안)을 위한 고려요인과 기본방향 제시

- 연안·해양지역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사업은 고도성장기에 활용했던 해양공간의 해체와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연안형 도시재생의 고려요인은 연안·해양의 가치발현, 연안·해양과 도시와의 연결성 고려, 해수면 상승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연안공간 조성, 지역 이해관계자의 사회문화적 수요 반영, 연안·해양 관련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정하였음
- 이에 따른 연안형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은 ‘연안·해양축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재편방향 설정’, ‘연안·해양가치와 본연의 기능을 살린 재생전략 마련’, ‘해양경제공간의 재배치를 통한 일자리 창

출', '해안경관과 재해대응 등을 고려한 해안접근시설의 공공 디자인 적용'으로 제시함

그림 5. 연안형 도시재생의 고려요인과 기본방향

#### 고려요인(안)

- 연안·해양의 가치발현
- 연안·해양과 도시와의 연결성 고려
- 해수면상승·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연안공간 조성
- 지역이해관계자의 사회문화적 수요 반영
- 연안·해양 관련 일자리 창출

#### 기본방향(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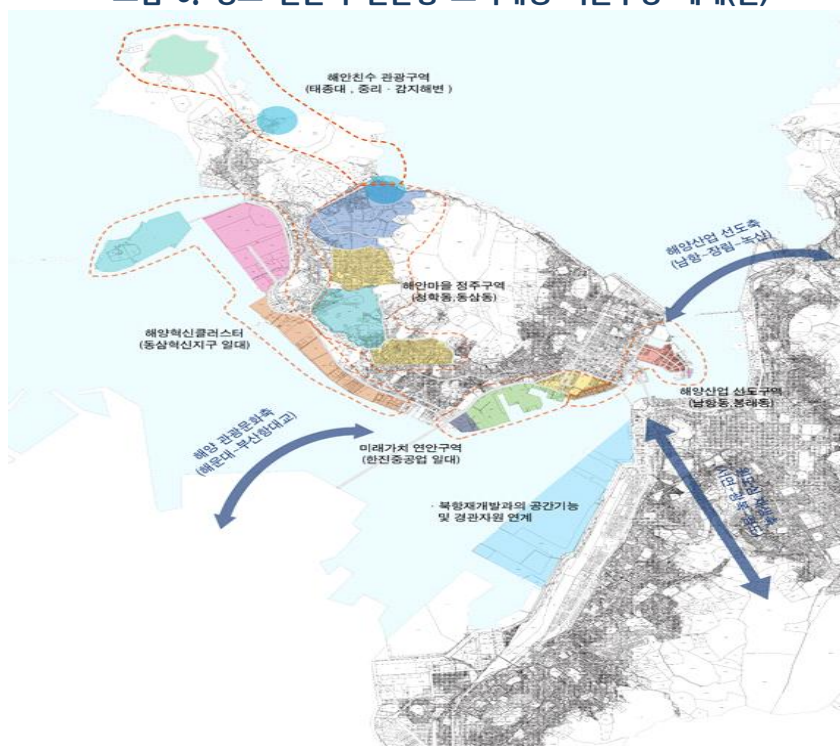
- 연안·해양축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재편방향 설정
- 연안·해양가치와 본연의 기능을 살린 재생전략 마련
- 해양경제공간의 재배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마련
- 해안접근시설의 공공디자인 적용(해안경관+재해대응)

자료 : 저자작성

## ■ 연안형 도시재생의 공간기본구상 - 영도 연안권역별 재생 기본구상(안) 제시

- 부산 영도연안을 대상으로 한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안)은 영도 주변도심과 주변 해안공간의 기능을 고려해 연안·해양축을 설정하고, 영도의 사회경제적·환경적 특성과 주요 현안 분석, 정부정책의 부합성 등을 고려한 연안·해양권역을 구분하며, 영도 연안의 역사성과 장소성, 생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개 권역별 재생 기본구상 방향을 제시함

그림 6. 영도 연안의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 체계(안)



자료 : 저자작성



- 부산 영도연안의 도시재생의 기본 축은 ‘해양관광문화축(해운대~부산항대교)’, ‘원도심재생축(서면~광복~영도)’, ‘해양산업선도축(남항대교~장림~녹산)’으로 설정하고, ①해양산업 선도구역(남항동·봉래동), ②해안마을 정주구역(청학동·동삼동), ③해양혁신 클러스터(동삼혁신지구), ④해양친수관 광구역(태종대·중리·감지해변), ⑤미래가치 연안구역(영도조선소 일대)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재생 기본구상(안)을 제안함

## ■ 해양산업 선도구역 (남항동·봉래동 일대)

- 근대 조선 산업 발상지인 남항동의 지역성을 살리기 위한 건물·시설물 등의 해양 공공디자인을 적용함
- 해안접근로 환경 개선 및 해양 경관 통경축 마련과 유희부지 매입 등을 통한 해안여가공간을 조성하여 연안접근성 확보가 필요함
- 봉래동은 물류보세창고 매입 및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 식당 및 여가휴식 공간을 조성함
- 봉래나루로 앞 선박시설 재배치를 통한 해안 경관축 확보 및 산업유산자원으로서 해상식당, 박물관 등 관광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원도심(중구, 서구, 동구)과의 관광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그림 7. 해양산업 선도구역 (남항동·봉래동) 재생 기본구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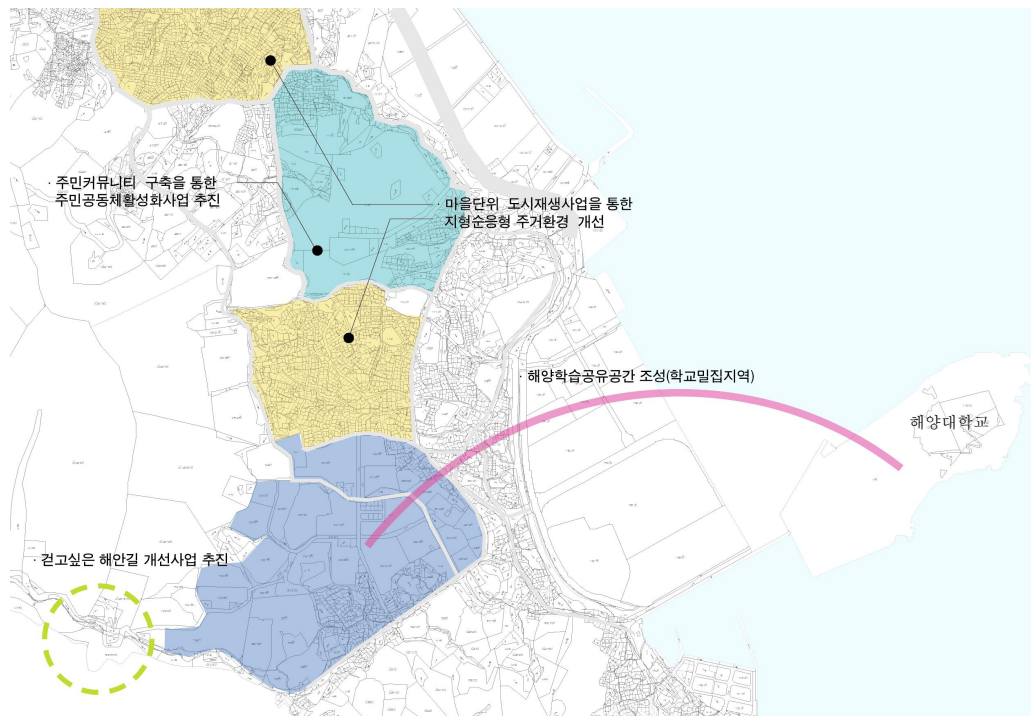


자료 : 저자작성

## ■ 해안마을 정주구역 (청학동·동삼동 일대)

- 청학동과 동삼동은 영도 내 대표 주거지역으로 지형의 대부분이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마을 단위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형순응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함
-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역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활성화 사업, 해양관련 축제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 참여기회를 제공함
- 영도 내 높은 주거비용에 따른 교육시설의 입지율도 높으므로 주거 및 교육 환경의 연계를 위한 해양 학습 공유 공간 조성과 산·학·연 연계 협력을 통한 취업 지원 교육 및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그림 8. 해안마을 정주구역 (청학동·동삼동) 재생 기본구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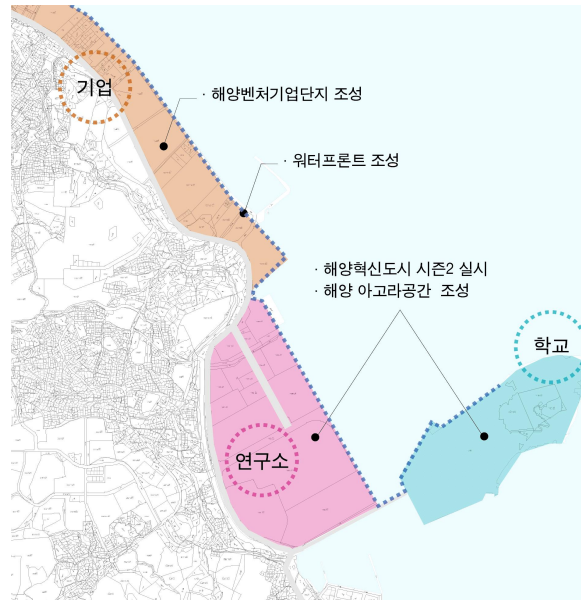


자료 : 저자작성

## ■ 해양혁신 클러스터 (동삼혁신지구 일대)

-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인 ‘혁신도시 시즌2’의 이행을 위한 북항과 동삼혁신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신해양경제클러스터 조성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함
- 해양혁신도시로서 지속적 발전과 신해양경제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역 내 해양벤처기업 유치 필요하므로 현 청학동 내 공업지역 부지를 해양벤처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그림 9. 해양혁신 클러스터 (동삼혁신지구) 재생 기본구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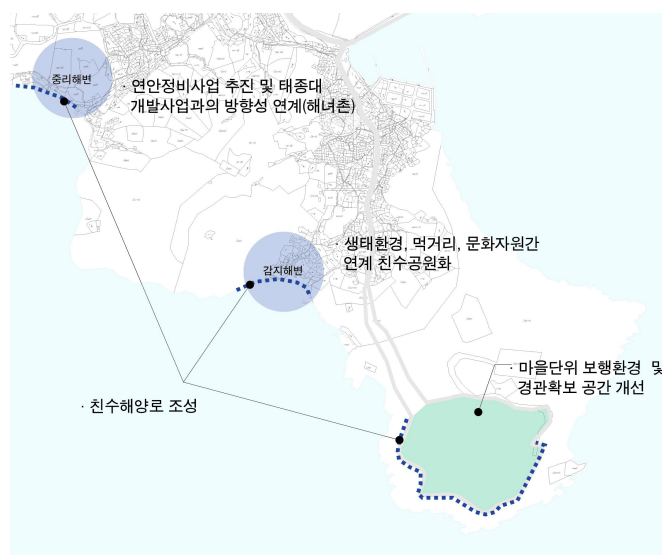


자료 : 저자작성

### ■ 해양친수 관광구역 (태종대·중리·감지 해변 일대)

- 태종대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유원지이자 명승지로서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마을단위 보행환경 및 경관확보 공간 개선사업 추진, 태종대와 인접한 감지 및 중리해변, 해녀촌, 스쿠버 체험활동 등 생태환경, 먹거리, 문화자원 간 연계 친수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림 10. 해양친수 관광구역 (태종대·중리·감지해변) 재생디자인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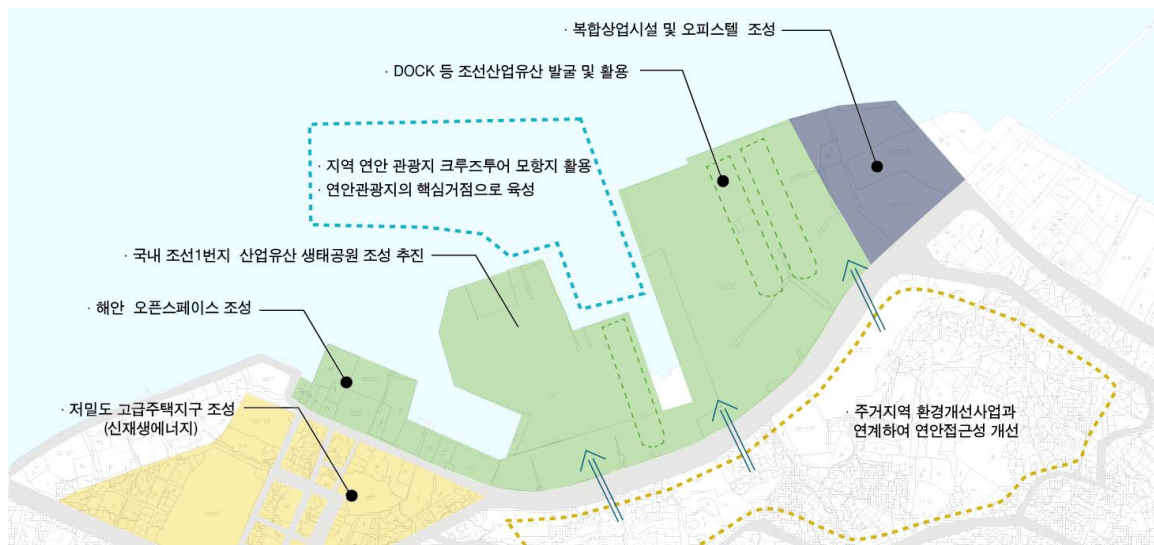


자료 : 저자작성

## ■ 미래가치 연안구역 (영도조선소 일대)

- 국내 조선 1번지 산업유산 박물관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배후 주거지역 환경 개선 사업의 연계  
를 통해 연안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며, 크루즈 모항지 활용 및 연안관광지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방  
안을 마련해야 함

그림 11. 미래가치 연안구역 (영도조선소 일대) 재생 기본구상(안)



자료 : 저자작성

## 연안·해양가치를 살린 도시재생체제 구축과 연안·해양 지역 별 맞춤형 종합적 재활성화 전략 마련 필요

- 연안지역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연안·해양의 가치를 복원해 도시성장의 핵심공간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도시와 연안·해양공간과의 연결성을 고려한 수변공간의 재정비와  
과거 연안·해양공간의 생태·역사문화자산 등과 새로운 친수문화가치가 복합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새로운 친수공간 생산, 해역공간의 기능과 도심기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연안형 도시재생체제 구  
축이 필요함
- 연안·해양은 국가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견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중요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크게 주목되고 있음. 연안·해양지역의 개방성 및 접근성, 보유자원의 독특  
성,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 등을 활용하여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  
록 연안·해양의 사회경제적·생태적 특성과 기능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재활성화계획 수립이 필  
요함



## 항만공간 중심의 종합적 재생 거버넌스 체계 마련

- 부산 북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의 북항재개발사업, 부산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도시경제 플랫폼 구축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해양수산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부산 북항, 부산역·자성대 부두 등 북항 주변일대를 통합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 중임
- 부산 북항을 중심으로 다부처의 유사중복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부산 북항과 주변 해안공간 활용의 비효율성이 우려됨. 부산 북항 등과 같이 노후유휴화된 항만공간의 재생·재활성화 계획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항만도시 재생의 지속적·효율적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부문별 전문가가 포함된 항만재생·재활성화 거버넌스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 긴 호흡을 가지고 차근차근 수립·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친수해안의 공공 접근권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국내외 연안형 도시재생 사례의 공통점은 도시민과 방문객 등을 위한 친수해안 조성과 물리적·시각적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보행자 이동체계를 세밀하게 디자인하는 것으로, 해안 수변공간의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연안·해양의 공공적 가치를 복원하기 위한 연안·해양공간 활용의 기본철학이라 할 수 있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제시한 ‘보행권의 보장’이 우리 해안 수변로와 공간에 적용되도록 해안 수변로의 보행자의 안전과 접근 편리성·쾌적성·미관성 등을 동시에 고려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하고, 보행자의 증진과 보행사업 개선사업 등을 통해 연안의 공공적 가치와 심미적 가치를 제고해야 함

## KMI 연구보고서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국내 해운금융의 한계 및 발전 방향	2017.09.07
제2호	한·투발루 협력증진을 위한 참다랑어 외해양식 투자의 타당성 분석	2017.09.08
제3호	물류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	2017.09.11
제4호	수산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2017.09.12
제5호	AMP 설치 수요조사 및 추진과제 연구	2017.09.13
제6호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중구 자갈치 시장 재개발을 통해 아름다운 해양도시 건설	2017.09.14
제7호	러·일 간 남쿠릴 열도 분쟁의 최근 동향	2017.09.18
제8호	항만 내 어항구 개발과 관리제도 개선방안	2017.09.19
제9호	선박교통관제(VTS)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2017.09.28
제10호	갯벌복원사업, 원칙과 기준, 절차 등 제도정비를 통한 체계적 수행 필요	2017.09.29
제11호	페루 수산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7.10.10
제12호	전자상거래 상업항 개발전략	2017.10.11